

◆ 07년 6월 고1 17~20번

[17~20]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금이란 정부 또는 지방 정부가 수입을 얻기 위해 법률의 규정에 따라 직접적인 반대급부 없이 자연인이나 법인에게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이다. 즉, 세금은 정부가 사회 안전과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재를 공급하는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가계나 기업의 소득을 가져가는 부(富)의 강제 이전(移轉)인 것이다.

납세자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각종 재정 활동, 즉 각종 공공 시설, 보건 의료, 복지 및 후생 등의 편익에 대해서 더 큰 혜택을 원한다. 그러나 공공 서비스 확충을 위하여 세금을 더 많이 내겠다고 나서는 사람은 보기 드물다.

역사적으로 볼 때 시민 혁명이나 민중 봉기 등의 배경에는 정부의 과도한 세금 징수도 하나의 요인으로 자리 잡고 있다. 현대에도 정부가 세금을 인상하여 어떤 재정 사업을 하려고 할 때, 국민들은 자신들에게 별로 혜택이 없거나 부담하다고 생각될 경우 ③납세 거부 운동을 펼치거나 정치적 선택으로 조세 저항을 표출하기도 한다. 그래서 세계 대부분의 국가는 원활한 재정 활동을 위한 조세 정책에 골몰하고 있다.

경제학의 시조인 아담 스미스를 비롯한 많은 경제학자들이 제시하는 바람직한 조세 원칙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공평과 효율의 원칙이라 할 수 있다. 공평의 원칙이란 특권 계급을 인정하지 않고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이고, 효율의 원칙이란 정부가 효율적인 제도로 세금을 과세해야 하며 납세자들로부터 불만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⑥징세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조세 원칙을 설명하려 할 때 프랑스 루이 14세 때의 재상 콜베르의 주장을 대표적으로 인용한다. 콜베르는 가장 바람직한 조세의 원칙은 거위의 털을 뽑는 것과 같다고 하였다. 즉, ①거위가 소리를 가장 적게 지르게 하면서 털을 가장 많이 뽑는 것이 가장 훌륭한 조세 원칙이라는 것이다.

거위의 깃털을 뽑는 과정에서 거위를 함부로 다루면 거위는 소리를 지르거나 달아나 버릴 것이다. 동일한 세금을 거두더라도 납세자들이 세금을 내는 것 자체가 불편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또 어떤 거위도 차별하지 말고 공평하게 깃털

을 뽑아야 한다. 이것은 모든 납세자들에게 공평한 과세를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신용 카드 영수증 복권 제도나 현금 카드 제도 등도 공평한 과세를 위해서이다.

더불어 거위 각각의 상태를 감안하여 깃털을 뽑아야 한다. 만일 약하고 병든 거위에게서 건강한 거위와 동일한 수의 깃털을 뽑게 되면 약하고 병든 거위들의 불평·불만이 생길 것이다. 더 나아가 거위의 깃털을 무리하게 뽑을 경우 거위는 죽고 결국에는 깃털을 생산할 수 없게 될 것이다.

17. 위 글을 바탕으로 강연회를 개최하기 위해 안내문을 작성하려고 한다. ㉔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 주 제 : ㉔
- ▷ 주 최 : ○○ 고등학교 학생회
- ▷ 장 소 : ○○ 고등학교 3층 대회의실
- ▷ 일 시 : 2007년 6월 ○일

- ① 바람직한 조세의 원칙
- ② 납세자의 올바른 자세
- ③ 효율적인 정부의 구조
- ④ 세금의 정확한 의미
- ⑤ 납세 의무의 역사

18. 위 글을 읽고 내용을 정리해 보았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납세자들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세금이 부과되어야 한다. ①
- 대다수의 국민들은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받기 위해 세금을 많이 내려고 한다. ②
- 무리한 세금 부과는 국민과 국가를 모두 힘들게 할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한다. ③
- 정부는 납세자들의 불만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세금을 징수하여야 한다. ④
- 공평의 조세 원칙에 따르면 국민은 누구나 자신의 능력에 따라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 ⑤

19. <보기>의 관점에서 ㉕을 비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보 기 >

정부의 재정 활동에서 세입과 세출은 서로 일치해야 한다. 만일 국민 경제가 원활하게 운영되는 시기에 세입이 세출보다 많았다면, 이는 정부가 필요 이상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여 국민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쳤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이다.

- ① 자유주의 경제 아래서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시장 경제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
- ② 정부는 국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세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 ③ 정부는 국민이 내는 세금을 생활 보호, 의료비, 연금 등의 사회 보장 분야에 써야 한다.
- ④ 한 나라의 경제가 착실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에 필요한 운영 자금이 원활하게 공급되어야 한다.
- ⑤ 정부는 사전에 필요한 경비를 정확히 예측하여 필요한 만큼만 세금을 걷어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20. 의미 관계가 ㉖ : ㉗와 가장 유사한 것은? [1점]

- ① 컴퓨터를 사용한 후에 반드시 전원을 꺼야 한다.
- ② 관객이 늘어남에 따라 극장이 점차 대형화되었다.
- ③ 자전거 타이어는 여름에 팽창하고 겨울에 수축한다.
- ④ 먼 바다에 나가기 위해서는 배를 먼저 수리해야 한다.
- ⑤ 얇게 뜯 김은 부드럽고 맛이 좋아서 높은 값에 팔린다.

◆ 18년 3월 고1 31~33번

[31 ~ 33]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조세는 국가의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 경제 주체인 기업과 국민들로부터 거두어들이는 돈이다. 그런데 국가가 조세를 강제로 부과하다 보니 경제 주체의 의욕을 떨어뜨려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거나 조세를 부과하는 방식이 공평하지 못해 불만을 야기하는 문제가 나타난다. 따라서 조세를 부과할 때는 조세의 효율성과 공평성을 고려해야 한다.

우선 ㉠ 조세의 효율성에 대해서 알아보자. 상품에 소비세를 부과하면 상품의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가 상품을 적게 구매하기 때문에 상품을 통해 얻는 소비자의 편익*이 줄어들게 되고, 생산자가 상품을 팔아서 얻는 이윤도 줄어들게 된다.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는 편익이 줄어드는 것을 경제적 손실이라고 하는데 조세로 인하여 경제적 손실이 생기면 경기가 둔화될 수 있다. 이처럼 조세를 부과하게 되면 경제적 손실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최소화하도록 조세를 부과해야 조세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 조세의 공평성은 조세 부과와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으로, 조세의 공평성이 확보되면 조세 부과와 형평성이 높아져서 조세 저항을 줄일 수 있다.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준으로는 편익 원칙과 능력 원칙이 있다. 편익 원칙은 조세를 통해 제공되는 도로나 가로등과 같은 공공재*를 소비함으로써 얻는 편익이 클수록 더 많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는 공공재를 사용하는 만큼 세금을 내는 것이므로 납세자의 저항이 크지 않지만, 현실적으로 공공재의 사용량을 측정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고 조세 부담자와 편익 수혜자가 달라지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

능력 원칙은 개인의 소득이나 재산 등을 고려한 세금 부담 능력에 따라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조세를 통해 소득을 재분배하는 효과가 있다. 능력 원칙은 수직적 공평과 수평적 공평으로 나뉜다. 수직적 공평은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을수록 세금을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특정 세금을 내야 하는 모든 납세자에게 같은 세율을 적용하는 비례세나 소득 수준이 올라감에 따라 점점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누진세를 시행하기도 한다.

수평적 공평은 소득이나 재산이 같은 경우 세금도 같게 부담해야 한다는 원칙이다. 그런데 수치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이 달라, 내야 하는 세금에 차이가 생길 수 있다. 예를 들어 소득이 동일하더라도 부양가족의 수가 다르면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에 차이가 생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공평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에서는 공제 제도를 통해 조세 부담 능력이 적은 사람의 세금을 감면해 주기도 한다.

* 편익: 편리하고 유익함.

* 공공재: 모든 사람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

31.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상반된 두 입장을 비교, 분석한 후 이를 절충하고 있다.
- ② 대상을 기준에 따라 구분한 뒤 그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 ③ 대상의 개념을 그와 유사한 대상에 빗대어 소개하고 있다.
- ④ 통념을 반박하며 대상이 가진 속성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다.
- ⑤ 시간의 흐름에 따라 대상이 발달하는 과정을 서술하고 있다.

32. ㉠과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은 조세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되어 있다.
- ② ㉡은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 ③ ㉠은 ㉡과 달리 소득 재분배를 목적으로 한다.
- ④ ㉡은 ㉠과 달리 조세 부과와 형평성을 실현하는 것이다.
- ⑤ ㉠과 ㉡은 모두 조세를 부과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건이다.

33. <보기>는 경제 수업의 일부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할 때, 선생님의 질문에 적절하게 답한 학생을 모두 골라 바르게 묶은 것은? [3점]

< 보 기 >

선생님: 여러분, 아래 표는 소득을 기준으로, A, B, C의 세금 공제 내역을 가정한 것입니다. 표를 보고 조세의 공평성이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각자 분석해 볼까요?

구분	소득 (만 원)	세율 (%)	공제액 (만 원)	납부액 (만 원)	공제 항목
A	3,000	5	0	150	공제 없음
B	3,000	5	100	50	부양가족 2인
C	4,000	10	100	300	부양가족 2인

성근: A와 달리 B에게 공제 혜택을 부여함으로써 조세의 공평성이 약화되고 있어요. ㄱ

수지: B가 A와 달리 부양가족 공제를 받은 것은 실질적인 조세 부담 능력을 고려한 것이네요. ㄴ

현욱: B와 C의 납부액에 차이가 있는 것은 편익 원칙을 적용하여 세금을 징수했기 때문이에요. ㄷ

유미: B의 세율이 5%이고, C의 세율이 10%인 것은 수직적 공평을 위한 누진세가 적용된 결과겠네요. ㄹ

- ① ㄱ, ㄷ
- ② ㄴ,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ㄱ, ㄴ, ㄹ

[16 ~ 19]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가 사회복지 분야에 깊숙이 개입하면서 조세 부담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높아져 온 것은 사실이다. 선진국의 경우 조세 부담률, 즉 조세 수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수준을 넘는 경우도 있다. 이는 국민이 벌어들인 소득 중 반 이상을 정부가 가져다 쓴다는 것을 뜻해, 개인의 자유로운 결정을 중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그리 바람직한 일이 아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은 20%를 조금 넘는 수준이어서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낮은 편이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정책이 아직도 결핍만 단계인 것을 생각하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수준에서 이것도 너무 과도한 부담이기 때문에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문제는 이론적으로 답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다. 그렇지만 사회복지 향상을 위해 정부가 활동 영역을 좀 더 넓혀야 할 부분이 아직 많이 ㉠ 남아 있고, 그렇다면 조세부담률이 어느 정도 높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로 보인다.

전통적으로 조세는 정부 수입을 얻는 수단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져왔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 들어오면서 조세는 단순한 수입원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경제 안정을 위해 정부가 개입을 하는데, 이때 조세가 매우 중요한 정책 수단으로 사용된다. 예컨대 경제가 침체되었을 때는 국민의 세금 부담을 줄여 주머니에 더 많은 돈을 남겨 줌으로써 소비 지출을 늘리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경제 안정을 위해 거둬들이는 세금의 크기를 조정하다 보면 정부 재정에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 재정 적자는 국채 발행을 통해 메워지는 것이 보통인데, 여러 해 동안 계속 재정 적자가 발생하면 국채의 발행량이 계속 늘어나는 문제가 발생한다. 국채 발행액의 증가는 나중에 국가가 갚아야 할 채무의 증가를 의미하기 때문에 한정 없이 국채를 찍어내기는 힘들다. 현대의 정부 중에는 재정 적자의 누적으로 인해 너무 많은 국채가 발행된 나머지 골머리를 앓는 사례가 상당히 많다.

나아가 조세는 개인이나 기업의 행동을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는 수단으로도 자주 사용된다. 에너지 사용 절감을 유도하기 위해 에너지세를 부과한다든가, 오염물질 방출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세를 부과하는 것이 그 좋은 예다. 나아가 법인세제도를 활용해 기업으로 하여금 더 많은 투자를 하도록 유도하는 경우도 많다.

16 위 글의 논지 전개 방식으로 적절한 것은?

- ① 중심 화제의 기능을 사례를 들어 설명하고 있다.
- ② 기준에 따라 논지 대상을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③ 특정 이론의 변화 양상을 시대 순으로 살펴보고 있다.
- ④ 용어의 어원을 밝히면서 대상의 개념을 설명하고 있다.
- ⑤ 현상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17 위 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경제 안정을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필요하다.
- ② 조세부담률은 개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③ 조세의 역할은 과거에 비해 오늘날 많이 확대되었다.
- ④ 우리나라는 선진국에 비해 사회복지 정책이 미흡하다.
- ⑤ 조세 정책으로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

18 위 글을 읽은 독자가 <보기>에 대해 보인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국가별 조세부담률(%)

연도 국가	1980	1990	2000	2010
A	25	28	30	35
B	47	52	58	61
C	20	16	13	11
D	52	51	51	52
E	30	30	30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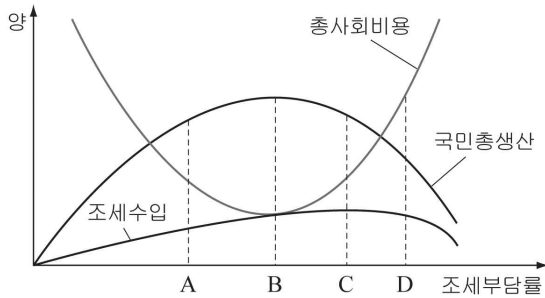
- ① A 국가는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조세부담률을 높이고 있군.
- ② B 국가에서는 일부의 사람들이 조세 정책에 반발할 수도 있겠군.
- ③ C 국가에서 조세부담률이 낮아 재정 적자가 발생한다면, 국채를 발행할 수 있겠군.
- ④ D 국가는 조세부담률이 높아서 수준 높은 사회복지 정책을 펼칠 수 있겠군.
- ⑤ E 국가가 최근 조세부담률을 낮춘 것을 보면, 경제 안정 정책을 시행한다고 볼 수 있겠군.

19 ㉠과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 ① 나는 역사에 이름이 남는 사람이 되고 싶다.
- ② 그들이 떠난 자리에는 쓰레기만 남아 주위가 어지러웠다.
- ③ 영화는 용돈을 절약하여 남은 돈으로 필요한 물건을 샀다.
- ④ 그의 첫인상이 나에게 오래도록 남아 기억에서 사라지지 않았다.
- ⑤ 은수는 아직 공부해야 할 부분이 남아 있어서 다른 것을 할 수 없다.

[44 ~ 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사회 복지 정책에는 재원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국가는 국민들에게 조세를 부과하는데, 국민에게 부과되는 조세의 부담률이 높을수록 조세수입은 증가한다. 그러나 일정한 조세부담률 이상부터는 오히려 줄어들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이들은 어떠한 관계에 있는가?



B점까지는 조세부담률을 높일수록 국민총생산은 증가한다. 국가가 조세수입으로 각종의 물적 자본이나 인적 자본에 투자하여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반면, 이 정도의 조세부담률에서는 국민총생산을 줄일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B점을 넘어서면 국민총생산은 줄어들 수 있다. 높은 조세부담률에서 사람들의 근로 동기나 저축 동기가 약해져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자본 투자가 줄어들고, 기업들도 노동 비용이 커져 경쟁력이 떨어져 경제활동이 위축되기 때문이다.

한편 조세수입은 국민총생산이 증가할수록 과세대상이 늘어나기 때문에 당연히 늘어난다. 뿐만 아니라 조세부담률이 B점을 지나 국민총생산은 줄어들어도 C점까지는 조세수입이 증가한다. B점을 지나면 국민총생산이 줄어 과세대상이 줄어들지만 조세부담률은 높아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C점 이상으로 높아지게 되면 이때부터는 조세수입도 줄어들게 된다. 국민총생산이 크게 떨어지고 각종 절세나 탈세의 방법으로 조세를 기피하려는 노력이 크게 늘어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국민총생산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 사회 복지의 재원도 줄어들어 경제와 복지 둘 다 최악의 상황이 되는 것이다.

총사회비용도 조세수입과 국민총생산에 따라 변화한다. 총사회비용은 국민총생산을 높일 수 있는 투자 비용 부분과, 조세의 비효율로 인해 생기는 국민총생산의 감소 부분을 합쳐서 구성된다. 조세부담률이 매우 낮은 수준에서는, 조세수입이 적어 총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투자를 못해 총생산도 줄어들고 결과적으로 총사회비용은 커져서 비효율적이게 된다. 그러나 조세부담률이 점점 높아지면 조세의 비효율성이 줄어들어 총사회비용이 줄어들다가 B점에서 최자가 된 이후부터는 다시 증가된다. 왜냐하면, 조세의 비효율성이 다시 커지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의 조세부담률이 사회적으로 합리적인가? 이것은 국가들이 처한 경제적, 사회적, 정치적, 문화적 상황들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 복지국가를 비판하는 국가와 옹호하는 국가가 서로 정책이 다른 것처럼 조세부담률도 다르기 때문이다. 적정 조세부담률은 국가에 따라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결정될 수밖에 없고, 따라서 이를 결정하는 일은 어렵기 때문에 각 국가들에서의 적절한 조세부담률은 상당 부분 이념적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44. 위 글에서 알 수 없는 것은?

- ① 조세수입은 사회 복지 정책의 재원이 될 수 있다.
- ②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적절한 조세부담률은 없다.
- ③ 조세의 부과 및 징수는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
- ④ 조세수입은 국민총생산과 조세부담률에 의해 결정된다.
- ⑤ 국민총생산은 사람들의 근로, 저축 동기에 영향을 받는다.

45. 위 글로 보아 <보기>의 A국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A국은 지난 20여 년간 고도로 발전된 사회 복지 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높은 조세부담률을 유지하고 있다. 높은 조세부담률이 총생산 감소의 원인임을 알면서도, 사회 복지 정책을 축소할 수 없어 조세부담률을 낮추지 못하고 있다.

- ① 조세부담률이 비효율적일 것이다.
- ② 복지국가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다.
- ③ 경제와 복지 둘 다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
- ④ 국민들이 조세를 기피하려는 노력을 많이 할 것이다.
- ⑤ 조세부담률을 결정하는 주된 요인은 경제적 여건이다.

46. <보기>는 두 집단의 주장이다. 각 집단에서 인식하고 있는 조세부담률의 현재 수준을 그래프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단, 지문의 그래프를 이용할 것.)

— < 보 기 —

조세부담률을 낮추면,

- ㉠ 집단 : 경제활동은 위축되고 조세수입도 줄어들 것이므로 조세부담률을 높여야 한다.
- ㉡ 집단 :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조세수입은 늘어날 것이므로 조세부담률을 낮춰야 한다.

- | | | |
|---|---|---|
| | ㉠ | ㉡ |
| ① | A | D |
| ② | B | D |
| ③ | C | A |
| ④ | C | D |
| ⑤ | D | B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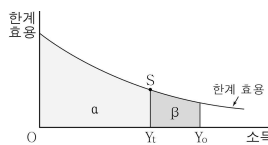
[16~2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세원이란 조세가 부과되는 원천인데, 소득은 대표적인 세원 중 하나이다. 조세를 부과할 때 세율을 적용하는 부분은 세원 전체가 아니다. 가령 우리나라는 ①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개인의 총소득 중 일부를 공제*한 뒤에 세율을 적용한다. 과세 대상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동일한 자에게, 동일한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개인의 총소득에서 공제를 한 뒤,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을 과세 표준이라 한다. 그리고 납세 부담액, 즉 세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함으로써 ② 산출된다. 납세자가 부담할 세액을 결정하는 데 활용되는 세율은 한계 세율이다. 한계 세율이란 세액의 증가분이 과세 표준의 증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는데, 세액의 증가분을 과세 표준의 증가분으로 나눈 값이다. 이 밖에도 세율에는 세액을 과세 표준으로 나눈 값인 평균 세율, 세액을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 나눈 값인 실효 세율 등이 있다.

[A] 다음 예를 통해 세율에 대해 이해해 보자. 소득세의 세율이 과세 표준 금액 1천만 원 이하는 10%, 1천만 원 초과 4천만 원 이하는 20%라 하자. 이처럼 과세 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는 까닭은 소득에 대응하는 세율을 일일이 확정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과세 표준 금액이 3천만 원인 사람의 세액은 '1천만 원 \times 0.1(10%) + 2천만 원 \times 0.2(20%) = 5백만 원'으로 계산된다. 이 경우 평균 세율은 약 16.7%(5백만 원/3천만 원)가 된다. 과세 표준에 세율을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따라 세율 구조가 결정된다.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누진 세율 구조라고 한다. 그런데 누진 세율 구조가 아니더라도 고소득일수록 세액이 증가할 수 있으므로 세율 구조는 평균 세율의 증가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면 비례 세율 구조, 평균 세율이 오히려 감소하면 역진 세율 구조, 함께 증가하면 누진 세율 구조이다.

대다수 국가에서 소득세는 누진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제적 능력에 따라 조세를 부담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일찍이 공리주의자 밀은 조세 부담이 개인의 소득 감소를 유발하므로 세금 납부에 따른 경제적 희생, 즉 효용의 손실이 균등해야 공평하다고 보았다. 이를 균등 희생 원리라고 하는데, 밀의 이러한 주장은 후대 학자들에 의해 누진 세율 구조를 ③ 옹호하는 근거로 활용되었다. 여기서 희생이란 세액 자체가 아니라 납세로 인한 총효용의 감소분이다. 그런데 밀은 균등하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는 논하지 않았다. 이에 후대 학자들은 균등의 의미를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으로 구분하여 논의하였다. 이러한 논의는 소득만이 개인의 효용을 결정하고 효용은 측정 가능하며 소득 증가에 따라 한계 효용이 체감한다는 가정에 ④ 입각해 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균등한 희생과 관련 있는 세 원칙은 <그림>에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소득의 한계 효용이란 소득이 1단위 증가했을 때 개인이 얻게 되는 만족의 정도를 의미한다.



<그림>

<그림>에서 원래 소득이 Y_0 였던 사람이 세액 T를 내면 세 후 소득이 Y_1 로 줄어든다. 이때 희생된 효용의 절대량은 면적 β 로 나타낼 수 있다.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각 개인들이 조세를 부담함으로써 떠안게 되는 희생의 절대적 크기가 균등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 원칙 아래에서는 고소득자의 세액이 저소득자의 세액보다 커야 한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누진 세율 구조라고 ⑤ 단정하기 어렵다. 절대 희생 균등 원칙 아래에서는 소득이 1% 증가할 때 한계 효용은 1% 이상 감소할 정도로 한계 효용 곡선이 가파른 기울기를 가져야만 누진 세율 구조가 ⑥ 성립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극단적으로 생각했을 때,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0이라면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 아래에서는 모든 개인이 동일한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누진 세율 구조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것이다.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 이전 총소득으로부터 얻는 총효용에서 납세로 인한 효용의 상실, 즉 희생이 차지하는 비율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한다. 이는 <그림>에서 면적 β 를 면적 $a+\beta$ 로 나눈 값인 효용의 희생 비율이 모두 똑 같아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 원칙 아래에서 누진 세율 구조는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는 모양이지만 하다면 이루어질 수 있다. 즉 소득의 한계 효용 곡선이 반드시 가파른 기울기를 가질 필요는 없다.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 아래에서 만약 한계 효용 곡선의 기울기가 0이라면 비례 세율 구조가 될 것이다.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과세 이후에 얻는 한계 효용의 크기가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만 한다. <그림>에서 조세 부담의 마지막 단위에서 발생하는 한계 효용은 선분 Y_1S 의 길이로 나타낼 수 있는데,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따르면 이 길이가 모든 사람에게 같아지도록 해야 한다. 그 결과 과세 이전의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모든 개인이 동일한 효용의 크기를 가지게 된다. 따라서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을 적용하면 고 소득층일수록 매우 무거운 조세 부담이 요구된다.

* 공제: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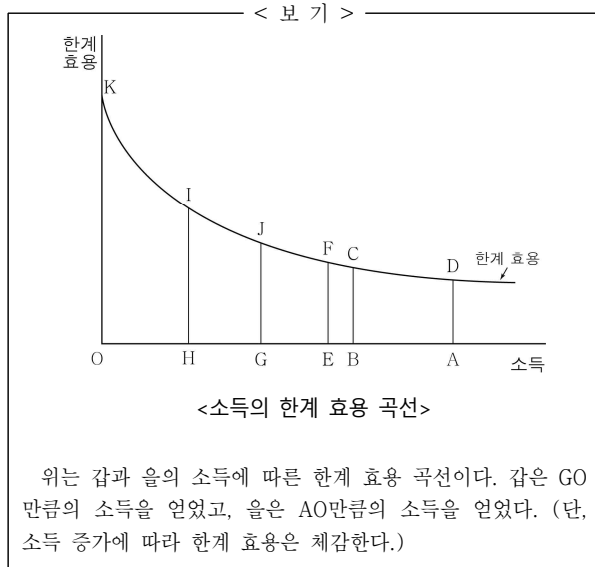
16.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조세의 본질과 기본 원칙을 제시하며 조세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② 조세 부과 효용성에 대한 고찰을 통해 누진적 조세 부담의 변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 ③ 조세 부담의 공평성에 대한 견해를 비교하며 조세 행정의 목적을 효율적 자원 배분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다.
- ④ 조세를 강제 징수하는 이유를 제시하고 여러 나라의 사례를 들어 세율 구조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 ⑤ 조세 관련 용어들의 개념을 제시하고 조세 부담에서의 균등한 희생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 원칙들을 설명하고 있다.

17.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일반적으로 평균 세율보다 실효 세율이 더 낮다.
- ② 납세 부담액은 과세 표준에 세율을 곱한 값이다.
- ③ 대다수 국가가 소득세에 비례 세율 구조를 적용하고 있다.
- ④ 세액 산출 시 과세 표준을 몇 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⑤ 누진 세율 구조인지의 여부는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증가하느냐로 판단할 수 있다.

18. 밑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만약 한계 효용 곡선이 체감하지 않고 기울기가 0이라면 갑과 을은 동일한 세액을 부담해야 한다.
- ② 절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과 을이 내야 할 세액이 각각 GH와 AB라면 GHIJ의 면적과 ABCD의 면적이 같아지도록 GH와 AB의 크기를 결정해야 한다.
- ③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을의 효용의 희생 비율이 AEFD/AOKD일 때에 갑의 효용의 희생 비율과 동일해진다 면 을에게 AE만큼의 세액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 ④ 비례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이 내야 할 세액이 GH이고 을이 내야 할 세액이 AB일 경우 GH를 GO로 나눈 값과 AB를 AO로 나눈 값이 모든 개인에게 동일해야 한다.
- ⑤ 한계 희생 균등의 원칙에 의하면, 갑의 세액이 GH라면 을의 조세 부담의 마지막 단위에서 발생하는 한계 효용이 HI가 되도록 을에게 AH만큼의 세액을 부담하게 해야 한다.

19. ㉠의 이유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부양가족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동일한 소득으로부터 얻는 만족감이 낮은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② 부양가족의 유무에 상관없이 동일한 소득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③ 가족의 모든 소득을 합산해야만 경제적 능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하여 탈세를 막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④ 동일한 소득이라면 개인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동일한 조세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공평하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 ⑤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더 큰 조세 부담을 요구하는 것이 조세 징수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기 위해서

20. [A]를 참고하여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보 기 >

소득세 제도			
과세 표준	(가)	(나)	(다)
100만 원	10만 원	30만 원	10만 원
200만 원	20만 원	60만 원	30만 원
300만 원	30만 원	90만 원	60만 원

위에 제시된 표는 어떤 국가에서 검토되고 있는 소득세 제도 (가)~(다)와 그에 따라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세액이다. (단, 과세 표준은 위의 3가지 경우만 있다고 가정한다.)

- ① (나)는 과세 표준이 클수록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세율 구조이다.
- ② (다)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세액을 부담하는 역진 세율 구조이다.
- ③ (가)는 (나)와 달리 모든 과세 표준에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는 세율 구조이다.
- ④ (나), (다)와 달리 (가)는 과세 표준이 증가할 때 평균 세율이 유지되는 세율 구조이다.
- ⑤ (가), (나)와 달리 (다)는 고소득자보다 저소득자의 세율을 낮게 책정하고 있는 세율 구조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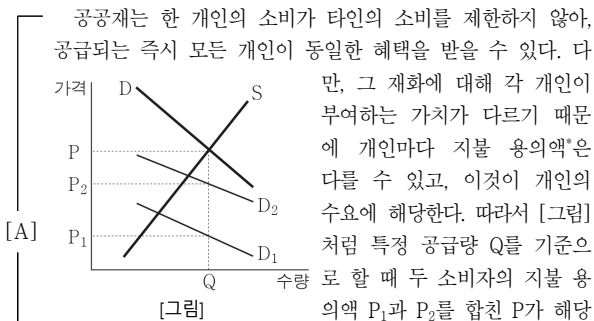
21.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계산하여 냄.
- ② ㉡: 두둔하고 편들어 지킴.
- ③ ㉢: 어떤 사실이나 주장 따위에 근거를 두어 그 입장에 섬.
- ④ ㉣: 딱 잘라서 판단하고 결정함.
- ⑤ ㉤: 정도나 수준이 나아지거나 높아짐.

[21 ~ 2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로등처럼 한 사람이 독점할 수 없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한다. 공공재는 주로 국민의 세금으로 공급될 뿐만 아니라 국민의 기초적 삶을 보장하기 때문에 적정량이 공급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공공재의 적정량은 어떻게 정해질까?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고 할 때, 일반적으로 공공재를 포함한 재화는 가격이 높을수록 수요량은 줄어드는 반면, 공급량은 늘어난다. 따라서 우하향하는 수요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곡선이 만나는 지점이 재화의 적정 공급량이 된다. 그런데 한 재화에 대한 시장의 수요는 각 개인의 수요를 합쳐 산출되기 때문에 개인의 수요곡선을 합쳐서 시장 수요곡선을 만든다. [그림]은 두 명의 소비자로서 구성된 사회를 가정했을 때 하나의 공공재에 대한 수요-공급곡선이다.



공공재에 대한 시장 전체의 수요가 되는 것이다. 즉 개인의 수요곡선인 D₁과 D₂를 수직으로 합친 것이 공공재의 수요곡선 D이고, D와 공급곡선 S가 만나는 지점에서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이 결정된다.

그런데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지불 용의액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 공공재에 대한 적정 공급량이 [그림]과 같이 결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로 인해 공공재가 공급되지 못하는 경우도 ㉠ 일어날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클라크 조세 방식이 제안되었다. 클라크 조세 방식은 공공재 공급 비용을 공평하게 나눈 세금인 '비용 분담금'에 '추가 세금'을 합쳐 개인이 총 지불해야 할 세금을 책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공공재를 공급하기 이전에 지불 용의액, 순이익 등으로 표출되는 개인의 선호도를 파악하여 공급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따른다. 단,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끔 유도해야 한다. 만약 자신의 선호도가 자신이 내야 할 세금의 크기를 결정한다면 사람들은 선호도를 속일 수 있으므로, 클라크 조세 방식은 개인이 표출한 지불 용의액이 그대로 개인이 지불해야 할 세금의 총 액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 사람들이 선호도를 속일 필요가 없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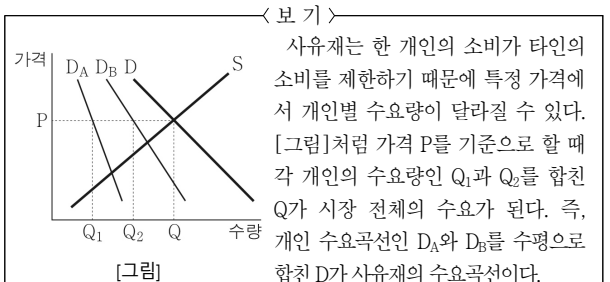
하나의 공공재에 대한 공급 여부를 결정할 때 클라크 조세가 적용되는 방식을 ㉡ 교량 공급 결정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자. 세 사람이 사는 마을에 600만 원이 드는 교량을 만든다고 할 때, 교량에 대한 지불 용의액은 A는 500만 원, B는 200만 원, C는 100만 원이라고 하자. 전체 구성원들의 지불 용의액의 합이 공공재의 공급 비용과 같거나 그보다 커야 그 공공재가 공급되므로 이 마을에는 교량 건설이 가능하다. 공공재의 공급 비용은 구성원들에게 똑같이 분담하여 지불하게 하므로 세 사람의 비용 분담금은 각각 200만 원이다. 그런데 한 개인의 순이익이 다른 구성원들의 순이익의 합보다 크면 자신의 선호도로 인해 선호도

가 낮은 다른 사람에게 상대적으로 손실을 안겨준 셈이므로 그 개인은 추가 세금을 지불하게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추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 이때 개인의 순이익은 지불 용의액에서 비용 분담금을 뺀 금액으로 그 값이 음수(-)인 경우 순손실로 볼 수 있다. 따라서 A의 순이익은 300만 원, B의 순이익은 0원이 되고, C는 순이익이 -100만 원이므로 100만 원의 순손실을 얻게 된다. 결국 A의 순이익인 300만 원이 B와 C의 순이익 합인 -100만 원보다 크므로 A는 추가 세금을 지불해야 한다. B와 C는 각각 자신의 순이익이 다른 구성원들의 순이익의 합보다 작으므로 추가 세금 없이 200만 원을 지불하면 된다. 만약 A가 없었다면 지불 용의액의 합이 300만 원이므로 공급 비용인 600만 원보다 적어 교량은 건설되지 못한다. 즉 A가 없었다면 공공재의 공급 결정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의미이다. ㉢ 클라크 조세 방식에서는 이와 같이 공공재의 공급 결정 여부에 절대적인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을 '중추적 사람'이라고 한다. 이 경우 중추적 사람이 지불해야 할 추가 세금은 다른 구성원들의 순손실의 합에 해당하므로 C의 순손실 100만 원이 A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이다. 결국 A는 비용 분담금 200만 원에 추가 세금을 더한 300만 원을 세금으로 내게 된다.

그런데 교량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할 때 어떤 개인이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인다고 가정해 보자. 만약 A가 지불 용의액을 낮게 표출하면 교량이 건설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A는 교량이 건설되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순이익을 얻지 못하게 된다. 또한 교량 건설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지불 용의액을 높게 표출하더라도 자신이 내야 할 추가 세금에는 변화가 없다. 따라서 A는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일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다.

*지불 용의액: 소비자가 재화에 대해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고 금액.

21. [A]와 <보기>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단, 두 명의 소비자로서 구성된 사회를 가정했으며, 가격 이외의 다른 조건은 일정함.

- ① <보기>의 수요자들과 달리, [A]의 D₁의 수요자와 D₂의 수요자는 Q라고 하는 공급량에 대해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② [A]의 수요자들과 달리, <보기>의 D_A의 수요자와 D_B의 수요자는 각각 P라는 가격에서 Q라고 하는 공급량을 소비할 수 있다.
- ③ [A]와 <보기> 모두 수요곡선인 D와 공급곡선인 S가 만나는 지점의 수량이 각 재화의 적정 공급량이다.
- ④ [A]와 <보기>에서 소비자의 수요곡선이 하나씩 추가된다면 [A]의 D는 위쪽으로, <보기>의 D는 오른쪽으로 이동할 것이다.
- ⑤ [A]의 D₁과 D₂는 특정 공급량에서 그 재화에 대해 개인이 부여하는 가치가 다름을, <보기>의 D_A와 D_B는 특정 가격에서 그 재화에 대한 개인별 수요량이 다름을 나타낸다.

22. ㉠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 ① B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A는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400만 원이라고 표출할 경우, A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은 줄어든다.
- ② A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B는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100만 원이라고 표출할 경우, B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은 늘어난다.
- ③ A와 B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C는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0원이라고 표출할 경우, C가 내야 할 추가 세금은 줄어든다.
- ④ B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A가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100만 원이라고 표출한다면, A는 본래 얻을 수 있었던 300만 원의 순이익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된다.
- ⑤ A와 C는 지불 용의액을 진실하게 표출하고 B가 자신의 지불 용의액을 속여 100만 원이라고 표출한다면, B는 본래 얻을 수 있었던 200만 원의 순이익을 얻을 기회를 잃게 된다.

23. <보기>는 윗글과 관련된 추가 자료이다. ㉡을 <보기>에 적용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두 개의 공공재 중 하나만 공급해야 할 때 클라크 조세 활용 방안]

구성원들이 두 개의 공공재 X, Y 중 자신이 원하는 하나의 공공재를 선택한 후, 그 공공재에 대한 선호도를 표출하여 각 개인의 순이익을 산출한다. 그 결과 순이익의 합이 큰 공공재가 공급된다. 이때 어떤 공공재를 선호했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구성원이 동일한 분담금을 지불하게 되며, 중추적 사람만 추가로 세금을 낸다.

[사례]

세 사람이 살고 있는 마을에서 공공 도서관과 공공 병원 중 하나를 건설하기로 했다. 이 때 각 개인의 선택과 선호도를 바탕으로 순이익을 산출한 결과, ‘갑’은 공공 도서관에 30만 원, ‘을’은 공공 병원에 40만 원, ‘병’은 공공 도서관에 20만 원의 순이익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① ‘갑’이 없더라도 공공 도서관이 공급되었을 것이므로, ‘갑’은 공공 도서관 설립에 따른 추가 세금을 지불할 것이다.
- ② ‘을’이 없었다면 공공 병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을’은 중추적 사람이다.
- ③ ‘병’이 없었다면 공공 병원이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병’은 공공 도서관 설립에 따른 추가 세금을 지불할 것이다.
- ④ ‘갑’과 ‘병’ 중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공공 도서관이 공급되지 않았을 것이므로, 둘 다 중추적 사람이다.
- ⑤ ‘을’과 ‘병’ 중 한 사람이라도 없었다면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분담금은 달라지므로, 둘 다 중추적 사람이다.

24. ‘클라크 조세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재의 적정 공급량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제안되었다.
- ② 공공재에 대한 개인의 선호도를 진실하게 밝히게 하려고 만든 것이다.
- ③ 한 개인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제한하지 않는 재화를 대상으로 한다.
- ④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분담금은 개인들이 표출한 선호도에 따라 다르게 책정된다.
- ⑤ 공공재에 대한 비용 분담금에 추가 세금을 합쳐 개인이 내야 할 세金的 액수가 책정된다.

25. 밑줄 친 단어 중, ㉢와 문맥적 의미가 가장 유사한 것은?

- ① 말다툼 끝에 싸움이 일어났다.
- ② 꺼져 가던 불꽃이 다시 일어났다.
- ③ 자명종 소리에 아침 일찍 일어났다.
- ④ 파도가 바위에 부딪치며 거품이 일어났다.
- ⑤ 맛있는 음식을 보자 갑자기 식욕이 일어났다.

[44~46]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정부가 기업이 사업에 투자할 때에는 현재에 투입될 비용과 미래에 발생할 이익을 비교하여 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한다. 이 경우 물가 상승, 투자 기회, 불확실성을 포함하는 할인율의 요인을 고려하여 미래의 가치를 현재의 가치로 환산한 후, 비용과 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해야 한다. 이러한 환산을 가능케 해 주는 개념이 할인율이다. 할인율은 이자율과 유사하지만 역으로 적용되는 개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현재의 이자율이 연 10%라면 올해의 10억 원은 내년에는 $(1+0.1)$ 을 곱한 11억 원이 되듯이, 할인율이 연 10%라면 내년의 11억 원의 현재 가치는 $(1+0.1)$ 로 나눈 10억 원이 된다.

공공사업의 타당성을 진단할 때에는 대개 미래 세대까지 고려하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사회 구성원이 느끼는 할인의 요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이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그래서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이 제기된다.

시장 이자율은 저축과 대출을 통한 자본의 공급과 수요에 의해 결정되는 값이다. 저축을 하는 사람들은 원금을 시장 이자율에 의해 미래에 더 큰 금액으로 볼릴 수 있고, 대출을 받는 사람들은 시장 이자율만큼 대출금에 대한 비용을 지불한다. 이때의 시장 이자율은 미래의 금액을 현재 가치로 환산할 때의 할인율로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사회적 할인율로 간주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이다. 한편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사회 전체적인 차원에서 공공사업에 투입될 자본이 민간 부문에서 이용될 수도 있으므로,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민간 부문에서만 높은 수익률을 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사회적 할인율로 적용하자는 주장은 수용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우선 ㉠ 공공 부문의 수익률이 민간 부문만큼 높다면, 민간 투자자가 가능한 부문에 굳이 정부가 투자할 필요가 있는가 하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더욱 중요한 것은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이, 비교적 단기적으로 실현되는 사적 이익을 추구하는 자본 시장에서 결정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사회적 할인율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은 일반적으로 그 이익이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나타난다. 이러한 점에서 공공사업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의 이념을 반영한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 이자율이나 민간 자본의 수익률처럼 높게 적용된다면, 미래 세대의 이익이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미래 세대를 배려하는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44. 위 글의 글쓴이가 상정하고 있는 핵심적인 질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장 이자율과 사회적 할인율은 어떻게 관련되는가?
- ② 자본 시장에서 미래 세대의 몫을 어떻게 고려해야 하는가?

- ③ 사회적 할인율이 민간 자본의 수익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④ 공공사업에 적용되는 사회적 할인율은 어떤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하는가?
- ⑤ 공공 부문이 수익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민간 부문과 어떻게 경쟁해야 하는가?

45. ㉡이 전제하고 있는 것은?

- ① 민간 투자도 공익성을 고려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 ②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투자를 선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 ③ 공공 투자와 민간 투자는 동등한 투자 기회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④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민간 자본의 수익률을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⑤ 정부는 민간 기업이 낮은 수익률로 인해 투자하기 어려운 공공 부문을 보완해야 한다.

46. 위 글로 보아 <보기>의 ㉢에 대한 판단으로 타당한 것은?

[3점]

—<보 기>—

한 개발 업체가 어느 지역의 자연 환경을 개발하여 놀이동산을 건설하려고 한다. 해당 지역 주민들은 자연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여 놀이동산의 건설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중시하여 찬성하는 사람들로 갈리어 있다. 그래서 개발 업체와 지역 주민들은 ㉢ 놀이동산으로부터 장기간 파급될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이익을 추정하고, 이를 현재 가치로 환산한 값을 계산해 보기로 하였다.

- ① 사업의 전망이 불확실하다고 판단하는 주민들은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② 후손을 위한 환경의 가치를 중시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③ 개발 업체는 놀이동산 개발의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④ 놀이동산이 소득 증진의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는 주민들은 높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⑤ 지역 경제 활성화의 효과가 나타나는 데 걸리는 시간이 길다고 판단되면 낮은 할인율을 적용할 것이다.

◆ 19 사관학교 1차 27~31번
〔27 ~ 31〕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비용편익분석은 공공사업의 경제성을 분석하는 대표적인 기법으로, 투입되는 비용과 얻을 수 있는 편익의 크기를 ㉠ 예측하고 비교해서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보는 것이다. 비용편익분석의 핵심은 비용과 편익을 화폐가치로 환산한 뒤 비교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공공사업에서 비용은 초기에 집중적으로 투입되는 데 비해 편익은 장기간에 걸쳐 ㉡ 분산되어 나타난다. 그러므로 비용과 편익을 정확하게 비교하기 위해서는 우선 서로 다른 시점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각각 계산해야 한다. 이때 편익이나 비용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치가 변화한다는 점을 무시하고 단순히 계산하여 합산하면 비용편익분석의 결과에 대한 신뢰성이 떨어지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기준이 되는 비율인 할인율을 적용해야 한다. 할인율을 r 이라고 할 때 1년 후의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text{현재가치} = \frac{\text{1년 후 미래가치}}{1+r}$$

이러한 방식을 활용하여 공공사업의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한 비용의 합계와 편익의 합계를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현재가치로 환산된 비용의 합계와 편익의 합계를 계산하여 비교하면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할 수 있는데, 그 기준이 되는 것으로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비’를 들 수 있다.

순현재가치는 현재가치로 환산된 편익의 합계에서 현재가치로 환산된 비용의 합계를 뺀 값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적절한 할인율이 적용되어 사업의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클수록 사업 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편익-비용비는 편익의 합계를 비용의 합계로 나눈 값, 즉 단위 비용 당 발생한 편익을 가리킨다.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클수록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 가치가 높은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그런데 양의 값을 갖는 순현재가치나 1보다 큰 편익-비용비가 사업 수행의 충분조건은 아니다. 예컨대 투자할 자금이 ㉠ 제한된 상태라면 순현재가치가 0보다 크거나 편익-비용비가 1보다 큰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필요한 비용이 투자할 자금의 범위 내에 있어야 투자할 수 있는 것이다.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비는 모두 비용과 편익을 고려한 사업 선택의 기준이다. 다만 전자가 비용을 뺀 편익의 규모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해 후자는 투입되는 비용의 효율성에 무게를 둔다. 따라서 사업 선택을 할 때에는 어떤 기준을 적용할지를 고민할 수 있다. 예컨대 정부에서 용수 공급을 위해 저수지 건설 사업을 추진한다고 하자. 총 3개의 후보지 A, B, C를 대상으로 저수지 건설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한 결과, 순현재가치는 $A > B > C$ 순으로 크게 나온 반면 편익-비용비는 $C > B > A$ 순으로 나올 수 있다. 실제로 정책을 결정할 때 순현재가치에 의한 우선순위와 편익-비용비에 의한 우선순위는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즉 편익의 규모는 크지만 투입되는 비용의 효율성이 낮거나, 반대로 투입되는 비용의 효율성은 높지만 편익의 규모가 작은 사업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용 예산이 제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 두 가지 기준을 복합적으로 ㉡ 고려하여 최적의 선택을 해야 한다.

한편 순현재가치나 편익-비용비는 모두 적용되는 할인율에 따라 그 값이 달라진다. 할인율이 높을수록 편익의 현재 가치는 낮게 평가된다. 공공사업이 초기에 비용이 집중적으로 들어가고 편익은 장기간에 걸쳐 서서히 발생한다는 점을 ㉢ 감안하면, 할인율이 높을수록 편익에 대한 현재가치가 낮아지므로 비용에 비해서 편익이 많이 줄어든다. 따라서 비용편익분석을 통해 대안을 평가하고 선택할 때에는 어떤 할인율을 적용하는가가 중요하다.

공공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에서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낮은 할인율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래서 공공사업의 경우에는 공적 차원의 할인율을 적용하는데 이를 사회적 할인율이라고 한다. 사회적 할인율은 자본 시장에서 결정되는 시장이자율보다 낮다. 공공사업은 장기간에 걸쳐 사회의 공익 증진에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사회적 할인율을 공공사업에 적용하여 투입되는 비용에 비해 편익의 가치를 크게 만들어 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결국 공공사업에서 사회적 할인율을 선택하는 것은 미래 세대의 이익에 무게를 두는 것과 같다. 만일 사회적 할인율이 시장이자율처럼 높다면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는 저평가되는 셈이다. 그러므로 사회적 할인율은 공익적 차원에서 결정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27. 밑글에서 언급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이유
- ② 비용편익분석에서 편익과 할인율의 관계
- ③ 비용편익분석을 적용하는 공공사업의 유형
- ④ 비용편익분석에서 미래가치를 현재가치로 환산하는 이유
- ⑤ 비용편익분석에서 순현재가치와 편익-비용비를 산출하는 방법

28.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 대한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 보 기 > —

정부는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A, B, C, D 각각의 사업에 대한 비용편익분석을 실시하여 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로 하였다. 편익의 합계와 비용의 합계는 다음과 같으며 정부가 배정한 총예산은 2,000이고 비용은 도로 건설비 외에는 발생하지 않는다. (단, 제시된 편익과 비용 외에는 어떤 요소도 고려하지 않는다.)

도로	편익의 합계	비용의 합계
A	500	250
B	700	400
C	1,000	800
D	1,500	1,000

- ① 만약 정부의 총예산이 2,450으로 증가한다면 A, B, C, D를 모두 건설할 수 있겠군.
- ② 가용 예산과 순현재가치를 고려했을 경우 B를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겠군.
- ③ 비용의 효율성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한다면 D보다 B를 먼저 건설해야 하겠군.
- ④ 단위 비용 당 최대의 편익을 얻기 위해서는 A를 우선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군.
- ⑤ 만약 C의 편익이 300만큼 줄어든다면 편익의 규모로 볼 때 C를 건설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겠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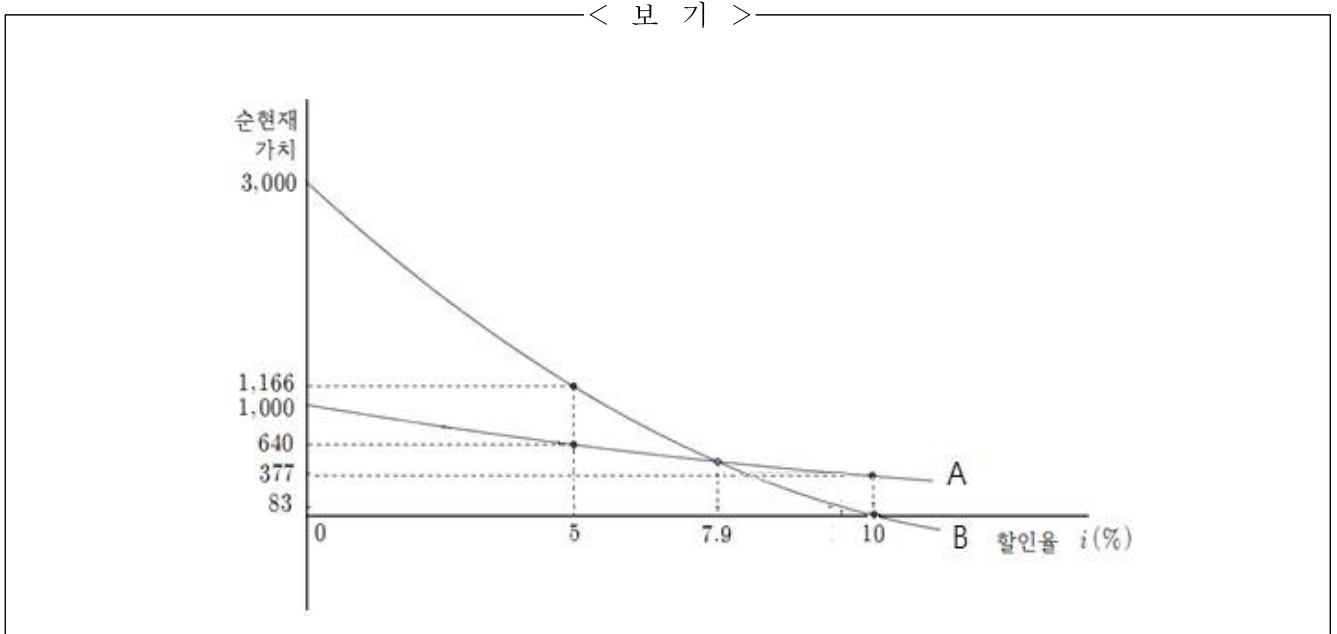
29. 밑글을 바탕으로 할 때, <보기>에서 선생님이 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 보 기 > —

선생님: 공공사업에 적용하는 사회적 할인율은 낮을수록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사회적 할인율을 지나치게 낮게 설정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문제가 생길 수 있을까요?

- ① 비용편익분석을 민간사업에는 적용할 수 없게 되어요.
- ② 공공사업의 가치가 과대평가되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요.
- ③ 비용편익분석을 하는 데 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하게 되어요.
- ④ 공공사업의 편익보다는 비용을 늘어나게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 ⑤ 공공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미래 세대에 대한 배려가 저평가될 수 있어요.

30. <보기>는 할인율 변화에 따른 A, B 두 사업의 순현재가치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단, A, B 두 사업의 비용은 동일하며, 제시되지 않은 다른 요소는 고려하지 않는다.)



- ① 할인율이 높아질수록 A와 B의 순현재가치는 높아진다.
- ② 할인율이 0%일 때 편익-비용비는 A가 B보다 높다.
- ③ 할인율이 5%일 때 A사업이 B사업보다 사업가치가 높다.
- ④ 할인율이 7.9%일 때 B사업이 A사업보다 사업가치가 높다.
- ⑤ 할인율이 10%를 초과하면 B의 편익-비용비는 1보다 작다.

31. ㉠ ~ ㉥의 사전적 의미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미리 헤아려 짐작함.
- ② ㉡: 갈라져 흩어짐.
- ③ ㉢: 하지 못하도록 함.
- ④ ㉤: 생각하고 헤아려 봄.
- ⑤ ㉥: 참고하여 생각함.